

『인권연구』 9(1): 1-34.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9(1): 1-34.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6.9.1.1>

[일반논문]

한국 인권연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학제간 연구 동향 분석, 2001~2025년*

조성권** · 김중우***

한글초록

우리 사회의 질차적 민주화가 자리 잡은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도 인권을 다룬 연구는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연구의 성장 흐름 속에서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조망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이 연구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n Citation Index)에서 ‘인권’ 키워드로 검색한 학술논문 10,739편(2001~2025년)을 대상으로, 초록에 문맥화 토픽 모델링(Contextualized Topic Model)을 적용하여 국내 인권연구의 주제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9개 토픽이 도출되었고 이를 8개 범주로 재분류했을 때, 헌법·형사사법, 국제인권과 북한 이슈 등 전통적 규범·제도 영역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점차 감소하는 반면,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복지와 돌봄, 소수자와 차별 등 생활세계에 밀착된 연구 주제는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기후·환경, 인공지능, 차별금지법과 같이 절대 비중은 작으나 부상 중인 의제도 확인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인권연구는 민주화 이행기 의제의 점진적 감소, 인권 정책 등 제도화 확산, 글로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NRF-2025S1A5B5A16007328). 또한 이 논문은 2026년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2회차 인권포럼에서 “한국 인권연구의 동향과 특징: 2000년대 이후 인권 연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연구임을 함께 밝힙니다. 포럼에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모든 선생님과,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유익한 코멘트를 보내주신 심사자 세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BK21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박사후연구원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연구교수

별 인권규범 수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인권연구, 연구 동향,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 학제간 연구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자료와 방법
- IV. 결과
- V. 논의: 한국 인권 연구의 흐름과 배경
- VI. 결론

I. 서론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로서, 근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규범이자 실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을 학문적 차원에서 다루는 ‘인권연구’는 당위적 규범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 법과 제도, 사회 현상, 그리고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학문으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연구’는 인권 규범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경향이 있으며 명시적으로 규범적이면서도 사회과학적 엄밀성을 갖춘 학제간 혹은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분과이다(Andreassen, et al., 2024; Skarstad, 2024).

우리 사회에서도 87년 체제의 성립과 민주화 이후 인권에 관한 관심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치학, 행정학, 법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권 관련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 가운데 한국의 인권연구가 우

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적 관심을 어떻게 포착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학문적 지식 축적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권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국내의 인권연구가 어떤 점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떠한 영역이 소외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 학계에서도 인권연구 동향 분석이 지속하여 이루어진 바 있으나, 주로 분과 학문 중심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정치학 분야의 경우 전체 인권 논문의 과반수가 한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국제적 맥락에서 조망하는 시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김헌준, 2018). 한편, 행정학 및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도 연구 대상은 여성, 노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집단별로 연구가 분절되어 있어 소수자성에 대한 통합적 논의나 사회 구조적 맥락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 지적되기도 한다(이병량·황설화, 2019).

이처럼 특정 분과 중심의 소규모 표본을 다룬 연구 경향 분석은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거시적 지형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인권’ 키워드로 검색되는 10,73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 인권연구의 전반적 동향과 담론 구성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학술연구의 초록을 대상으로 단어들의 출현 패턴을 통해 잠재적 주제 구조를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토픽 모델링(Blei, Ng, and Jordan, 2003)을 적용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전학습 언어모델의 문맥 정보를 학습 단계에서 반영하여, 단어의 문맥적 의미 차이까지 포착할 수 있는 문맥화 토픽 모델(Contextualized Topic Model, 이하 CTM)을 활용하였다(Bianchi, Terragni, and Hovy, 2021). 아래에서는 이를 통해 한국 인권연구의 주요 경향과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한 영역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권연구’의 개념

국내 인권연구의 동향을 다루기에 앞서, ‘인권연구(human rights studies, human rights research)’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인권은 법, 정치, 사회, 교육, 복지, 철학, 국제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인권연구’를 단일하게 정의하기 위한 공통된 합의는 찾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특성이 곧바로 인권연구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권연구는 인권침해 사실의 열거나 법적 조항의 해석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토대로 여러 사회 현상을 분석하며 실천적 변화를 모색하는 다학제적 혹은 학제 간 연구 영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학술지인 『인권연구』 역시 인권침해 문제를 학제간 시각으로 탐구하고 관련 담론 및 운동과의 연계를 주된 지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인권연구가 지닌 실천적, 학술적, 다학제적 복합성을 잘 보여준다(조효제, 2023).

인권연구의 실천적 지향으로 말미암아,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국제인권 기준의 설정과 해석, 권리침해의 문서화 등 규범적, 실천적 작업에 집중하는 법학(공법 중심)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인권연구를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증진에 관한 연구를 비전으로 제시하거나(Human Rights in Context, n.d.), 권리침해 패턴의 문서화와 가해자, 제도, 정책을 드러내기 위한 조사, 분석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Human Rights Advocacy and the History of Human Rights Standards, n.d.), 피해자, 증인 인터뷰에 기반한 현장 조사와 옹호 전략 수립을 연구의 핵심으로 제시하기도 한다(Human Rights Watch, n.d.).

이러한 법학 중심성은 국제인권규범 체계 자체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후 국제인권규범은 국제기준의 설정, 국가의 이행, 인권의 실현이라는 구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반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제노사이드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는 로마규정(Roma Statute)과 국제형사재판소를 축으로 하는 국제형법 체계에서 별도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인권의 의미가 사법화, 기술관료화되며 인권이 “기술적 언어”에 치중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 바 있다(Hopgood, 2013: 65). 즉, 한국 인권연구의 법학 편중 역시 이러한 규범 체계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인권연구가 사회과학의 방법론과 결합하고, 2000년대 이후 방법론적 정교화가 본격화되면서 그 범위는 점차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권이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고 권력 관계를 규명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를 강조하는 흐름과도 상통한다(Andreassen et al., 2024: 1). 이 과정에서 인권연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인권의 구성과 실현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혼합 방법 혹은 학제 간” 연구와 빈번하게 연결되는 영역으로 규정되기도 한다(Langford, 2024: 292). 다만, 이러한 확장 과정에서 기존 연구가 활동가적 열망에 의해 “소망 섞인 사고”에 빠지거나 연구 방법이 명료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며(Coomans, Grünfeld, and Kamminga, 2010: 180), 이는 인권연구의 개념적 명료화와 방법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연구의 수행 방식과 목적에 대한 논의도 심화되었다. 인권연구가 학술장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활동을 넘어, 연구 과정 자체에서 인권 실현의 진전, 비차별 원칙의 준수, 권리 보유자의 역량 강화 등 인권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에 기반한 연구 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Research)이 제시되었다(Smith, 2018). 비판이론의 관점에서는 인권연구를 “인권 규범에 기초하여, 그리고 이를 비판하며 수행되는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로 정의

하면서 인간 자유의 증진이라는 실천적 목적을 지니며 정치철학과 사회과학을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요청하기도 한다(Skarstad, 2024: 297-298). 보다 본질적으로는, 현대 인권 이론이 도덕적 관계에서의 인권 현실을 포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권을 정의하고 있어 이것이 인권연구의 한계를 형성한다는 지적도 이러한 논의와 연결된다(오수용, 2010).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인권연구를 그대로 분석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인권연구 동향 분석이라는 연구 목적에 맞게 보다 한정된 조작적 정의를 적용하고자 한다. 인권은 최소주의적 이해와 최대주의적 이해 사이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어떤 범위까지를 인권의 문제로 볼 것인지는 그 자체로 논쟁적이기도 하다(조효제, 2020). 넓은 의미의 인권은 권리나 기본권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포괄할 수 있으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연구 대상의 경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분석 범주의 일관성과 재현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인권연구를 “인권이라는 개념, 규범, 제도, 실천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학술 연구”로 정의한다(Severo et al., 2021: 3-4).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연구자들이 스스로 ‘인권’이라는 언어를 통해 문제를 구성하고 설명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인권의 본질적 범위를 확장하기보다 국내 학술 문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어떤 주제와 맥락 속에서 사용됐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

2. 국내 인권연구의 연구 경향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인권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학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학문 분과 내에서 또는 특정 주제(사회적 약자, 인권교육 등)를 중심으로 문헌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의 흐름을 진단해 왔다. 아래에서는 국내 인권연구의 흐름을 분석한 연구를 몇 가지 분

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198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및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수행된 인권연구 184편을 “제목, 초록, 키워드에 ‘인권’이란 단어가 포함된 모든 논문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한국 정치학의 인권연구는 주제와 방법론 면에서 뚜렷한 편중을 보였다(김헌준, 2018: 173). 분석한 자료 중 약 55%의 연구가 한반도 문제를 다루었고,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정치학 분야의 인권연구가 한국,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사례, 문헌 연구 위주의 정성적 접근이 대다수임을 보여주며,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한 이론 검증보다는 시의성 있는 정책적 대안 제시에 집중해 왔음을 시사한다.

행정학에서는 한국 행정학 분야에서 명시적으로 인권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955편을 텍스트마이닝 기법(주제어 빈도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사례가 있다(이병량·황철화, 2019). 여기서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의 양적 성장은 확인되었으나, 행정학 연구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다루면서도 주로 미시적인 직무 관련 측면에 한정되어 있어, 사회적 가치·인권 정책의 본질적 목표보다는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적 행태 연구의 범주에 집중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장애 및 교육 분야에서도 연구 경향에 대한 여러 분석이 이루어졌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애인 인권 관련 논문 95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주로 법률과 정책 및 문헌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현장의 인권침해 실태를 다루기보다 거시적인 법제도 분석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한다(정명선·이경준, 2012). 한편, 인권교육 분야를 다룬 연구 역시 유사한 한계를 보고한다(이혜영·신현기, 2019). 인권교육 분야의 경우 1999년부터 2008년 사이 석·박사 학위논문 86편(이지혜, 2009),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학위 및 학술논문 140편(강명숙, 2012) 등 주로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위논문의 경우 교육 과정에 집중되어 있고, 학술논문 또한 주제와 방법 측면에서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강명숙, 2012). 또한 인권감수성 관련 연구 129편을 분석한 사례에서는, 실험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연구 대상이 주로 학생과 교사에 국한되어 있어 연구 대상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박초희, 2019).

마지막으로, 국내 인권연구가 새로운 의제를 풍부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인 RISS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권 관련 문헌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가 공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허종렬, 2020). 이는 국내 인권연구가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권 의제의 탐색에 있어 아직 충분한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국내 인권연구 동향을 다룬 연구는 대체로 특정 분과 내 소규모 표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거시적 지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자료와 방법

1. 자료

이 글에서는 한국 인권연구의 동향과 지형을 분석하기 위해 제목, 초록, 키워드에 “인권”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학술지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인권연구가 여러 분과 학문에서 생산된 연구의 종합적 산물이며(김두년, 2013), 학문 경계를 가로지르는 다학제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특정 사회문제나 제도적 쟁점을 명시적으로 인권이라는 언어를 통해 해석하고 위치 지은 연구들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제목, 초록, 키워드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 권리 보장, 차별과 배제, 국가와 제도의 책임과 같은 인권의 규범적 틀 안에서 다루고 있다는 방

향으로 접근했다.

따라서 인권 키워드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 수집 범위를 축소하는 선택이 아니라, 국내 학술장에서 어떤 연구가 자신을 인권 담론의 일부로 위치 지어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학술적 담론 속에서 어떻게 명시적으로 호출되고 구성되었는지 더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인권연구 동향 분석에서도 제목, 초록, 키워드에 인권이 포함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을 선정한 사례가 있으며(김현준, 2018), Web of Science 기반의 국제 인권연구 동향 분석에서도 “human rights” 키워드를 활용해 다양한 학문 영역의 문헌을 식별한 바 있다(Severo et al., 2021).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키워드 기반 수집은 국내 학술장에서 명시적으로 ‘인권연구’로 자기 표상된 연구의 주제 구조와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조작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학술지와 논문의 서지정보, 학문 분야 분류, 학술지 등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점에서 국내 인권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자료원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2000년대 이전 연구는 디지털화 수준이 낮거나 초록과 서지정보가 불완전하게 제공되는 사례가 많아, 분석 대상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KCI의 학문 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기타 복합학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만을 포함함으로써 인권담론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수집 대상 학술지는 KCI 우수등재지,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로 제한하여 분석 자료의 학술적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서지정보는 Python의 BeautifulSoup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작성한 웹 크롤러로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0,739편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부 논문의 경우 초록이 제공되지 않아 원문 확인을 통해 보완하였고, 영문 초록만 제공된 경우에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국문으로 번역(기계번역 후 검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2. 방법

상기한 바와 같이 인권연구에서 다양한 사회과학 기반의 방법론이 접목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정부 보고서부터 언론 보도 등 인권 관련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Bagozzi and Berliner, 2018; Fariss, 2019; Koo and Choi, 2019). 이들 연구는 텍스트 기반 자료 분석이 단순히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실태를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할 것인지라는 인권연구의 핵심 방법론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인권연구의 초록에 내재한 잠재 주제를 추출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적용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개별 문서를 여러 잠재 토픽의 혼합으로, 동시에 각 토픽을 특정 단어들이 높은 확률로 함께 나타나는 분포로 가정하여 문서 집합의 의미구조를 탐색하는 비지도 학습 방법이다(Blei et al., 2003; Griffiths and Steyvers, 2004). 전통적인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 방법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은 자연어 처리, 문서 분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문서를 단어의 출현 빈도만으로 표현하고 단어 간 순서나 문법적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 단어 가방(bag-of-words) 가정에 기반한다. 따라서 텍스트의 문맥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Denny and Spirling, 2018; Wallach,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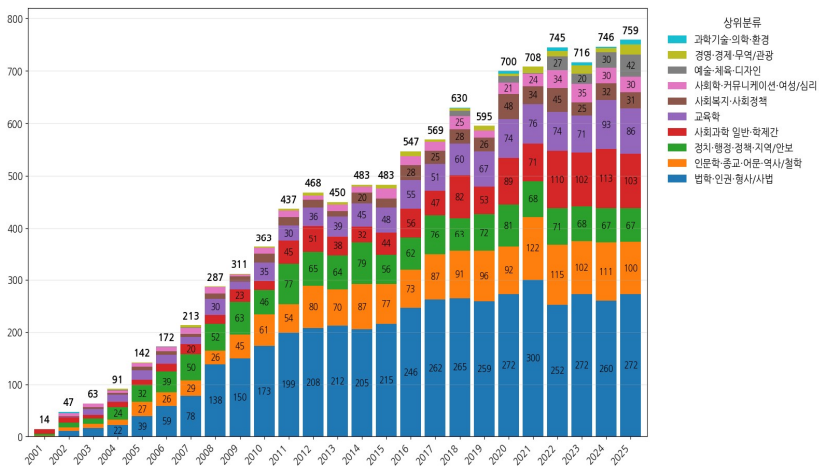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법론이 고안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문맥화 토픽 모델(CTM)을 적용하였다(Bianchi et al.,

2021). CTM은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통해 생성된 문서 임베딩을 변이형 오토인코더(Variational AutoEncoder) 구조에 결합함으로써, 단어의 출현 빈도뿐 아니라 문서 내에서 해당 단어가 사용된 맥락적 의미까지 반영하여 토픽을 추출한다. 이를 통해 기존 모델보다 더 응집적이고 해석하기 좋은 토픽을 산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Asnawi et al., 2023; Wang et al., 2025).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 주제, 개념, 제도, 집단 등 문서의 핵심 내용이 주로 명사를 통해 표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사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Denny and Spirling, 2018; Schofield, Magnusson, and Mimno, 2017). 이러한 명사 중심 분석은 서술적 낱어나 행위의 방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인권연구 전반의 주제 분포와 구조적 경향을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한 인권연구 토픽의 성격과 연구 동향의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사분면 도식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이 분석은 전략 다이어그램의 구성 원리를 참고하되(Cobo et al., 2011), 사분면 해석의 틀로는 기존의 중요도-수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프레임워크를 연구동향 분석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한 것이다(Martilla and James, 1977). 이번 분석에서 가로축은 분석 기간(2001~2025년) 전체에 발표된 모든 논문이 각 토픽에 부여한 비중을 산술평균으로 산출한 값으로, 해당 토픽이 분야 전반에서 차지해온 평균적 위상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토픽의 연도별 평균 비율을 시간 순으로 배열한 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최소제곱 추세선)을 구해 그 기울기를 취한 값이며, 양(+)이면 해당 토픽이 매년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음(-)이면 감소하는 추세를 가진다고 해석한다. 연도별 발표 편수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가중 왜곡을 줄이기 위해 세로축 산출 시에는 문서 단위가 아닌 연도 단위로 일차 집계한 값을 회귀에 투입하였다. 기울기가 0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는 t-검정에 기반한 p값으로 검정하며, p값 0.05 미만을 유의수준으로 설정하였다.

IV. 결과

<그림 1>은 분석을 위해 수집한 학술지의 전체 추이와 함께 KCI 기준 각 연구의 분야명을 상위 분야로 재분류한 결과이다. 추가적인 대분류는 개별 논문이 하나의 상위 분류에만 배정되도록 상호배타적 기준을 적용하였고, 분야명이 두 개 이상의 학문 영역과 관련될 수 있는 경우, 연구 주제의 제도적·학문적 중심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10개의 대분류를 설정했다.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봤을 때, 2001년 14건에서 2025년 759건으로 약 70배로 증가했다. 이는 국내 인권연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 범위와 관심 영역을 넓혀가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학술 영역임을 보여준다.



<그림 1> ‘인권’으로 검색된 연구의 발간 추이, 2001~2025년

또한, 이러한 국내 인권연구의 폭발적 성장에는 법학·인권·형사/사법 분야의 집중이 두드러지며, 이는 전체의 40.8%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상호배타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동시에 정치·행정·정책·

지역/안보(12.7%), 사회과학 일반·학제간(11.0%), 사회학·커뮤니케이션·여성/심리(3.6%) 등의 분야가 넓은 의미에서 사회과학적 연구라는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법학 분야의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봄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한국 인권연구가 헌법, 기본권, 형사절차, 국제인권법, 차별구제 등 법적·제도적 쟁점을 중심으로 축적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동시에 인권연구의 영역이 예술·체육 분야나 경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수행한 토픽 모델링은 수집한 전체 문서를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토픽 수를 추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토픽 일관성(coherence) 지표를 활용하였다. 토픽 일관성은 하나의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들이 실제 문서들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함께 출현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토픽의 의미적 응집성과 해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Röder, Both, and Hinneburg, 2015; Stevens et al., 2012).¹⁾ 후보 모형을 비교한 결과, 51개 토픽으로 구성된 모형이 일관성과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석 가능성과 변별성이 낮은 2개 토픽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9개 토픽을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1. 인권연구를 구성하는 토픽

<표 1>은 CTM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49개 토픽과 해당 토픽의 핵심 키워드를 기준으로 상위 8개 범주로 재분류한 것이다. 8

1) 본 연구에서는 CTM 모듈에서 지원하는 NPMI(normalized point-wise mutual information)에 기반하여 토픽 수에 따른 각 모형의 일관성 값을 비교하였다. NPMI는 두 단어가 우연히 함께 등장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문서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함께 출현하는지를 정규화하여 측정하는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NPMI 값이 높을수록 토픽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다.

개 상위 범주는 토픽별 상위 키워드 검토 후 토픽 확률 상위 대표 문서를 확인하고 범주를 배정했다. 그 후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개방 코딩을 통해 독립 분류를 통한 교차 검토를 수행하고 불일치 토픽은 협의를 거쳐 최종 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토픽은 가장 대표적인 분석 초점에 따라 하나의 범주에만 배정되도록 하여, 상위 범주들이 상호배타적이면서도 전체 토픽 구조를 최대한 포괄하도록 설계하였다. 다만, 범주 전체를 인권의 하위영역(자유권/사회권 등)으로 재명명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본 연구의 토픽이 명시적인 권리 항목별로 구분되기 보다는 연구 의제 중심으로 도출된 특성이 있고 그 결과 귀납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단일 권리 유형으로 배정하기 어려운 토픽이 다수인 점(예: 교육 범주에는 자유권적 의제와 사회권적 의제가 혼재)을 고려하여 이번 분석에서는 논문에서 드러난 의제별로 범주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북한·국제정치와 인권’과 ‘인권담론과 역사·문화적 재현’ 그룹이 각 8개 토픽(1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헌법·형사사법과 기본권’, ‘교육권과 인권교육’이 각 7개 토픽(14.3%)을 차지하였다. ‘소수자·차별과 인권’, ‘복지·돌봄과 피해회복’ 영역이 각각 6개 토픽(12.2%)으로 뒤를 이었으며, ‘정치·행정 거버넌스와 인권’에서는 4개 토픽(8.2%), ‘과학기술·기업과 인권’은 3개 토픽(6.1%)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인권연구가 한편으로는 법·제도와 국제질서, 역사·철학적 정당화의 문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소수자, 돌봄, 디지털 권리와 같은 실천적인 신흥 의제로 확장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토피법주화 목록(49개 토피)

분류	토피	주요 키워드	
1. 헌법·형사사법과 기본권	T02: 형사절차 공권	형사, 범죄, 절차, 수사, 진자, 공개, 필요, 피의자, 기관, 사법	
	T04: 피고인 방어권	증거, 진술, 피고인, 신문, 소송법, 법정, 실체, 배제, 피의자, 영상	
	T18: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자유, 표현, 명예, 형법, 혐오, 제한, 훼손, 사실, 원죄, 양심	
	T21: 영장주의와 인신보호	구속, 체포, 영장, 검사, 긴급, 인신, 검찰, 수사, 발부, 내사	
	T31: 사법구제와 손해배상	계약, 행위, 변호사, 소송, 재산, 위판, 판례, 보상, 적용, 배상	
	T40: 기본권과 인권	헌법, 기본권, 권리, 기본, 보장, 국민, 자유, 원리, 의미, 입헌	
	T45: 교정시설과 수용자 처우	사형, 교정, 수용자, 수형자, 처우, 폐지, 소년, 범죄자, 교도소, 치료	
	T05: 이민·난민 정책	정책, 정부, 지역, 국가, 경제, 이민, 아시아, 유럽연합, 추진, 난민	
	T06: 탈북민·난민 송환	난민, 송환,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이탈, 국경, 입국, 탈북민, 탈북, 지위	
	T14: 한반도 평화 담론	북한, 통일, 평화, 남북, 한반도, 체제, 남북한, 교류, 남한, 분단	
	T24: 양심적 병역거부	유럽, 재판소, 조약, 규약, 판결, 병역, 복무, 양심, 가입, 협약	
	T38: 유엔과 국제인도법	국제, 국제법, 유엔, 규범, 인도, 체제, 자결, 이사회, 간섭	
	T39: 국제외교와 인도적 원조	미국, 원조, 전략, 중국, 외교, 러시아, 대외, 무역, 미얀마, 양국	
	T41: 이산가족 문제	결의안, 김정일, 남북자, 레짐, 이산가족, 북한, 대북, 납치, 총회, 관여	
	T42: 국제법과 피해자 권리	국가, 형사, 절차, 재판, 사법, 인정, 피해자, 국제법, 범인, 국제	
T07: 다문화 가족 여성 인권	사회, 사우디, 문화, 가족, 한국, 여성, 다양, 운전, 다문화, 변화		
3. 소수자·차별과 인권	T20: 성매매와 페미니즘	여성, 첸더, 성매매, 남성, 페미니즘, 동성애, 매매, 여자, 남녀, 기부장	
	T23: 장애인 의사결정권	장애인, 정신, 장애, 의사, 후견, 청년, 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표현	
	T29: 차별금지법	차별, 성희롱, 혐오, 금지, 평등, 괴롭힘, 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표현	
	T48: 이주민·소수자 정체성	이주민, 소수, 다문화, 소수자, 이주자, 언어, 한국인, 이민자, 이주, 정체	
	T49: 이주노동자 권리	외국인, 노동자, 노동, 근로자, 근로, 임금, 고용, 신원, 허가, 이주	
	T01: 노인·시설 수용자 복지	노인, 시설, 고령, 건강, 의료, 보건, 복지, 교정, 환자, 정신	
	T08: 청소년 폭력·자살 실태	청소년, 경험, 자살, 실태, 폭력, 피해, 가해, 가출, 사이버, 연구원	
	T22: 우울·스트레스 분석	배개, 영향, 효과, 검증, 우울, 조절, 변수, 자아, 스트레스, 의도	
	4. 복지·돌봄과 피해회복		

	T30: 들봄·제할 서비스	복지사, 종사자, 육구, 제할, 관광, 들봄, 직업, 참여자, 서비스, 요양
	T32: 재해 피해자 보호	범죄, 테러, 발생, 피해자, 성폭력, 처벌, 예방, 재난, 가해자, 대응
	T34: 인권보호와 예방·상담 체계 필요, 보호, 규정, 제도, 보상, 상담, 예방, 침해, 조치, 방안	
	T03: 장애인 교육권	특수, 장애, 현장, 교육, 교사, 강사, 면담, 평생, 양성, 교원
	T12: 출산과 아동권	아동, 권리, 협약, 출산, 자녀, 등록, 임양, 출생, 대리모, 혼인
	T17: 인권 태도·의식 측정	태도, 차이, 감수, 긍정, 의식, 점수, 인식, 통계, 상관, 회귀
	T25: 영유아 인권교육	보육, 유아, 그림책,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놀이, 관계, 그림, 학습지
	T28: 다문화 인권교육	교육, 시민, 과정, 다양, 학습, 이해, 문화, 다문화, 수업, 교과서
	T33: 체계적 학생인권	학생, 학교, 체벌, 교권, 스포츠, 선수, 체육, 폭력, 교육법, 조례
	T44: 사회과 인권교육	교과서, 사회과, 성취, 단위, 함양, 서술, 도덕, 학습자, 지식, 학습
	T10: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정보, 개인, 프라이버시, 통신, 기술, 테러, 이용, 감시, 인터넷, 보호법
	T26: 기후·환경권과 인공지능	기후, 환경, 변화, 지능, 발전, 인공, 기술, 기반, 접근, 산업
	T37: 공금망 실사	기업, 경영, 지표, 소비자, 지속, 실사, 금융, 공금망, 성과, 이해관계자
	T11: 지방자치와 인권조례	도시, 지방, 단체, 지역, 자치, 조례, 계획, 사업, 센터, 수립
	T15: 인권 거버넌스	법률, 국회, 헌법, 행정, 입법, 의회, 지방, 국민, 개정, 위원회
	T35: 치안 문제와 검경조직 개혁 경찰, 조직, 업무, 검찰, 시위, 치안, 권한, 경찰관, 개혁, 수사	
	T46: 사회변동과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 민주, 세력, 권위주의, 대통령, 시위, 혁명, 시기, 정당
	T00: 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보호, 미디어, 기사, 뉴스, 선수, 키워드, 언론, 토크, 스포츠, 콘텐츠
	T09: 동서양 인권철학	아렌트, 유교, 서양, 철학, 사상, 허버마스, 유학, 하나님, 개인주의, 유길준
	T13: 생명윤리와 인간 존엄	인간, 생명, 존엄, 죽음, 윤리, 존제, 배아, 안락사, 인격, 자율
	T16: 기독교와 인권 담론	운동, 교회, 종교, 선교, 기독교, 개신교, 신학, 한국, 교단, 선교사
	T19: 위안부와 과거사 청산	일본, 과거사, 위안부, 청산, 전쟁, 일본군, 규명, 한일, 동원, 사건
	T36: 보편주의 인권철학	세계, 보편, 개념, 서구, 공동체, 정의, 평화, 인류, 지구, 주장
	T47: 역사적 재현	기억, 재일, 트라우마, 박물관, 조선인, 예술, 한센, 어린이, 기념, 영화
	T50: 문학을 통한 인권 재현	문학, 소설, 현실, 주제, 서사, 인물, 작가, 타자, 공간, 근대
5. 교육권과 인권교육		
6. 과학기술·기업과 인권		
7. 정치·행정 거버넌스와 인권		
8. 인권담론과 역사·문화적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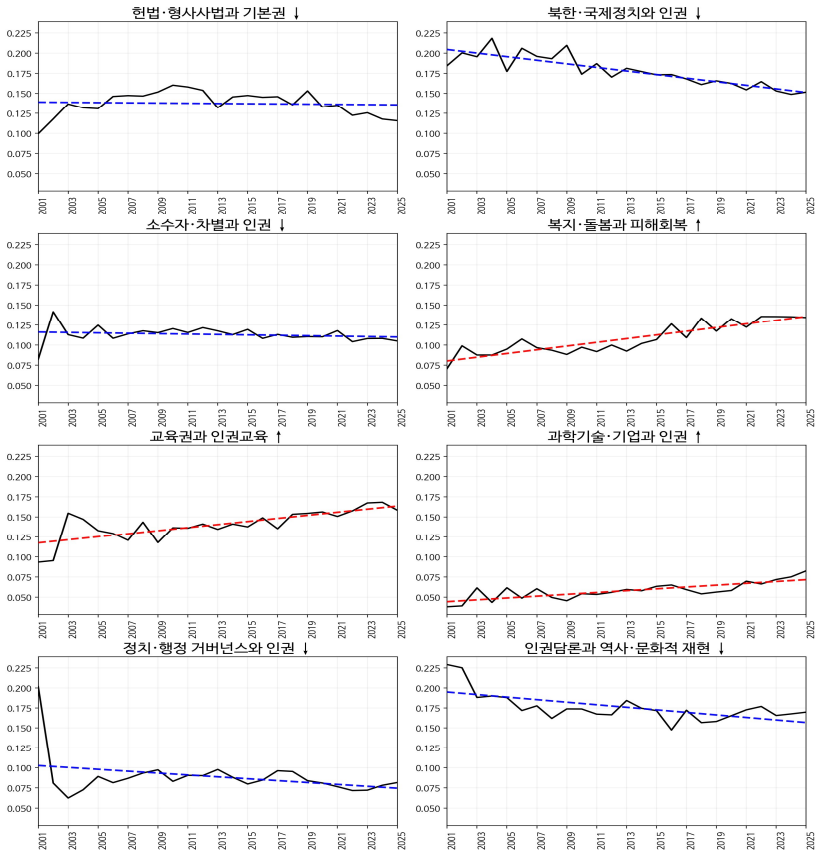
토픽 분류로 살펴봤을 때 한국 인권연구의 토픽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헌법·형사사법·국제인권과 같은 전통적 규범이나 제도 영역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소수자·젠더·이주·돌봄·교육과 같이 구체적 사회집단과 생활세계의 문제를 다룬 연구가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 문제나 기업 책임과 같은 새로운 의제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인권연구는 한편으로는 법학적·국제정치적 기반 위에서 전개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복지, 문화, 역사, 기술 영역 등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다층성은 한국 인권연구가 권리 침해 사례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규범적 정당화, 제도적 실현, 사회적 배제, 문화적 재현 등 인문, 사회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인다.

2. 인권연구 토픽의 시간적 변화

다만 모든 인권연구 주제가 고정된 비율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전체 토픽 그룹별 비중에 시간적 요인을 결합해 살펴본 <그림 2>에서 토픽 그룹 사이의 변화 방향이 구분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형사사법과 기본권’, ‘북한·국제정치와 인권’, ‘인권담론과 역사·문화적 재현’, ‘정치·행정 거버넌스와 인권’ 그룹과 같이 전통적 규범·제도 중심 영역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교육권과 인권교육’, ‘복지·돌봄과 피해회복’, ‘소수자·차별과 인권’ 등 생활세계와 밀접한 실천적 연구 영역은 증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과학기술·기업과 인권’ 영역 역시 전체 비중은 아직 크지 않지만, 점진적인 증가 양상을 나타냈다.

물론 <그림 2>는 전체 인권연구 내에서 각 주제군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특정 영역의 하락은 그 분야의 연구량 감소라기보다 인권연구 전체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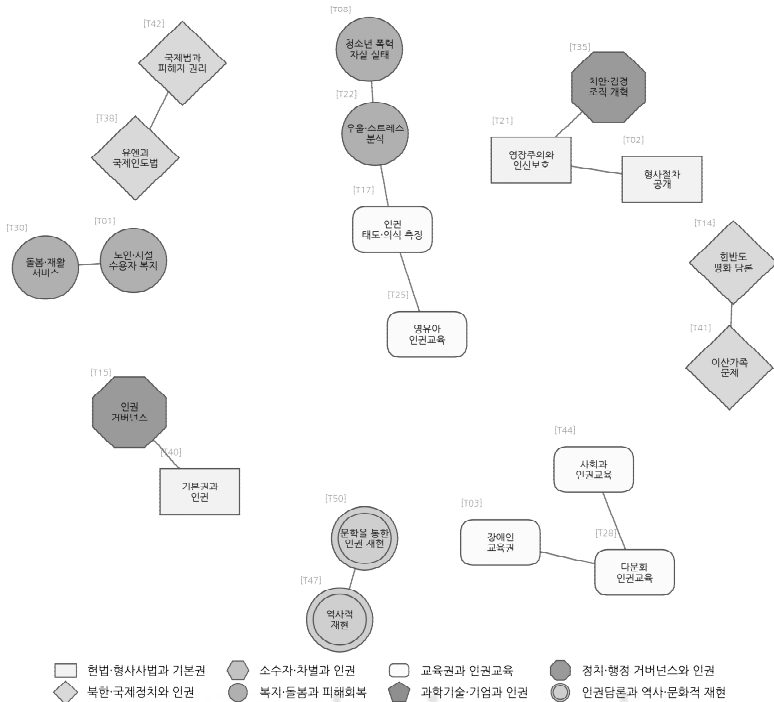


<그림 2> 토피 범주의 비율 추이, 2001~2025년

운 주제군의 성장 속도가 더 빨랐음을 동시에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한국 인권연구가 기존의 법·제도 중심 연구를 대체하고 있다 기보다, 그 기반 위에 생활세계, 취약성, 차별, 돌봄, 기술 변화와 같은 문제들을 덧붙이며 연구 지형을 다층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인권연구 토픽 간 연결 관계

한편, 아래 <그림 3>은 CTM을 통해 도출된 토픽들 사이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토픽 네트워크를 구성한 결과이다. 이는 개별 토픽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토픽들이 내용상 인접하여 군집을 이루거나 유사한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토픽간 연결을 보기 위한 상관계수의 임계점은 0.3으로 설정하였다. 임계점이 낮을 경우 네트워크 과밀로 군집 구조의 판독이 어려워지고, 높으면 고립 토픽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임계점을 0.4로 조정한 결과에서는 북한 관련 문제(T14-T41)와 청소년 연구(T8-T22), 인권 교육(T28-T44)가 여전히 연결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림 3> 토픽 네트워크 시각화

<그림 3>의 토픽 간 연결 관계는 국내 인권연구가 법·사법, 교육, 복지, 북한 문제 등 여러 하위영역이 분화된 상태에서 병존하는 다원적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 문제가 단일한 학술장 내에서 다루어지기보다, 각 인권이 의제로 다루어지는 주요 제도 영역과 사회문제의 맥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드러지는 연결 중 하나는 법·기본권·형사사법 관련 토픽들에서 확인된다. 그림의 왼쪽에는 ‘인권 거버넌스’, ‘기본권과 헌법’이 연결되어 있으며, 중간에는 ‘형사절차 공개’, ‘영장주의와 인신보호’, ‘치안·검찰 조직 개혁’이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의 행사와 그 통제, 절차적 권리의 보장, 헌법적 기본권 해석과 관련된 주제들이다. 특히 형사절차, 영장주의, 경찰·검찰 권한이 연결망을 이루는 것은 한국 인권연구에서 인권이 추상적 도덕 담론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강제처분, 공권력 행사와 직접 맞닿아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로 다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교육 관련 토픽들 역시 비교적 뚜렷한 연결망을 보인다. 사회과 인권교육과 함께 다문화(가정)·장애인과 같은 소수자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다른 흐름으로 영유아·청소년 인권과 방법론적 접근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인권교육 연구가 교과과정, 시민성 교육, 다문화 교육, 특수교육과 같은 제도적 교육뿐만 아니라, 인권 감수성, 태도, 청소년 경험과 같은 경험적·사회심리적 영역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적 재현 그룹에 속하는 토픽도 하나의 인접 영역을 형성한다. ‘역사적 재현’과 ‘문학과 인권 재현’이 연결된 것은 한국 인권연구가 법, 제도나 정책 분석뿐 아니라, 역사적 폭력의 기억, 집단적 트라우마, 문학적·문화적 재현을 통해 인권을 사유하는 연구 흐름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의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과거의 폭력과 억압을 어떻게 기억하고 서사화할 것인지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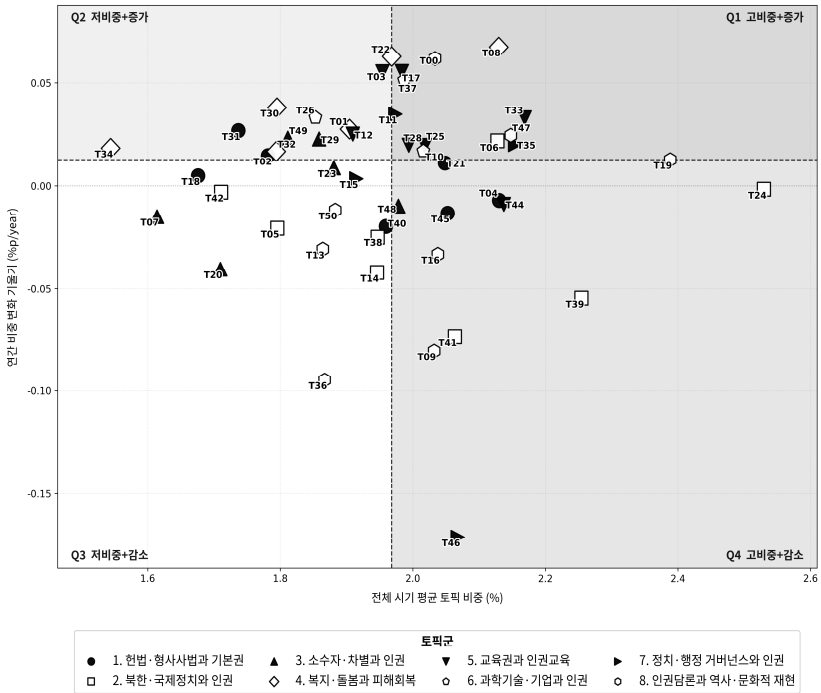
2>에서 나타나듯 인권담론과 역사·문화적 재현 토픽 그룹이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폭력, 식민 경험 등이 인권연구의 인문학적, 문화적 접근의 한 축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이 토픽 간 네트워크는 한국 인권연구가 상당한 수준의 주제 다양성과 전문화를 동시에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연결은 대체로 각 하위영역 내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영역을 가로지르는 강한 연결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는 한국 인권연구가 법, 교육, 복지, 북한·통일, 역사·문화 재현 등 각기 다른 제도적 장에서 독자적으로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인권연구 토픽의 비중과 변화량 교차 분석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시기의 연구 비중과 시간 흐름에 따른 비중 변화를 교차하여 성장 혹은 축소하는 인권연구 주제의 범주를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 지형을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가로축은 전체 시기에서 차지하는 각 토픽의 평균 비중, 세로축은 연단위로 환산한 토픽의 변동비율로 볼 수 있다.

1사분면(Q1)은 비중이 높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확장하는 영역으로, 유지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14개 인권연구 토픽이 분류되었으며, 특정 연구 주제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정 토픽의 과분포 없이 다양한 토픽 그룹이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인권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연구 영역이 특정 주제를 축으로 수렴하기보다는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질적으로 보이는 주제들이 함께 성장,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 인권연구의 의제가 다변화하는 과정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일본군 위안부와 과거사 청산’, ‘영유아 인권교육’, ‘치안 문제와 검경조직 개혁’ 등 4개 토픽은 증가 기울기가 통계적으



<그림 4> 인권연구 토픽의 전체 시기 비중과 변화량 교차 분석

로 유의미하지 않아, 안정적 유지에 가깝다고 보인다.

2사분면(Q2)은 절대 비중은 작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영역으로, 잠재적인 성장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돌봄·재활·예방 체계와 관련된 토픽이 집중되어 있어, 개별 권리 담론을 넘어 제도적 지원 및 대응 체계로 확장하기 위한 연구들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차별금지법과 기후·환경권과 인공지능 관련 연구 주제는 우리 사회의 인권연구가 글로벌, 최신 의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연구의 축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 영역의 연구 주제들은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영역은 향후 연구 역량이 집중된다면 유의미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사분면(Q3)은 다른 연구 주제에 비하여 절대 비중과 변화의 기울기가 모두 낮은 영역에 해당하며 연구 활성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 영역에는 13개 토픽이 위치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는 토픽으로는 ‘보편주의 인권철학’, ‘한반도 평화 담론’, ‘생명윤리와 인간 존엄’, ‘유엔과 국제인도법’, ‘이민·난민 정책’, ‘기본권과 인권’, ‘문학을 통한 인권 재현’ 등으로 주로 철학적, 국제법적, 평화연구 중심의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인권의 규범적 논의의 토대를 다루는 연구 주제(인권철학, 생명윤리, 존엄성 등)의 감소 경향이 해당 논의가 구체적 적용 영역(앞서 성장·확대 영역으로 분류된 주제들)의 논의를 위한 토대로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비율이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 규범적 재성찰 작업 자체가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실천적 영역의 성장이 규범적 논의 기반과 분리되는 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Q4)은 상대적으로 비중은 높았으나 시간에 따라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주제들로, 11개의 토픽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에는 한국 인권연구에서 2000년대 초 주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토픽이 포함되어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토픽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는 ‘사회변동과 민주주의’, ‘동서양 인권철학’, ‘이산가족 문제’, ‘국제외교와 인도적 원조’로 나타났다. 반면 ‘영장주의와 인신 보호’, ‘유럽인권재판소와 양심적 병역거부’, ‘피고인 방어권’, ‘사회과 인권교육’, ‘교정시설과 수용자 처우’나 ‘이주민·소수자 정체성’과 같은 토픽의 감소 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기독교와 인권 담론’의 경우 감소 기울기의 유의수준이 경계에 해당하여, 감소 추세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세를 보이는 토픽들은 주로 2000년대 초 다루어진 민주화 이행기와 냉전체제, 보편주의 철학 등

의 담론으로, 한국 인권연구가 시대적 의제 전환과 함께 논의의 무게 중심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3사분면에서 줄어든 연구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들 주제의 연구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해당 주제들의 의제 쇠신 부재에서 비롯된 것인지, 문제 해결 중심 연구로의 이행 과정에서 줄어든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작업은 후속 연구에서 질적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다.

V. 논의: 한국 인권 연구의 흐름과 배경

앞선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국내 인권연구가 다룬 연구 주제의 변동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제도적 맥락과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을 키워드로 포함한 연구에 한정하더라도, 2001년 14건에서 2025년 759건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은 그 자체가 인권에 관한 관심의 증대를 반영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변화 양상을 크게 세 축(‘민주화 이행기 의제의 점진적 감소’, ‘인권 정책의 제도화 확산’, ‘글로벌 인권규범의 수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첫째 축은 ‘민주화 이행기 의제의 점진적 감소’다. 이 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 의제가 국내 인권연구에서 차지해 온 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픽 비중의 측면에서 ‘북한·국제정치와 인권’, ‘인권담론과 역사·문화적 재현’, ‘헌법·형사사법과 기본권’이 주된 토픽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 인권연구의 역사적 맥락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국에서 인권 담론은 1970~80년대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과 권리 구제의 문제에서 출발한 배경이 있으며,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기본권과 공법에 대한 해석이 학술적 논의와 연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앞선 토픽 네트워크 분석에서 형사절차, 영장주의, 피고인 방어권, 기본권 해석 관련 토픽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군집을 형성하는 것은 II장에서 살펴본 인권규범 체계의 법제화 경로가 국내 학술장에 투영된 양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나 국제인권 관련 토픽이 비교

적 독립된 군집으로 나타나는 점 역시, 분단 체제라는 지정학적 특수성 속에서 북한 인권과 통일, 평화 의제가 국내 인권 담론에서 밀접하게 다루어지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2000년대 초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연구 주제들이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결과는 민주화 이행기에 형성된 연구 관심이 시대적 의제 전환과 함께 변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유의한 감소세를 보인 ‘사회변동과 민주주의’, ‘동서양 인권철학’, ‘이산가족 문제’, ‘국제외교와 인도적 원조’ 토픽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형성된 연구 기반 위에서 2000년대 초까지 인권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주제들이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상봉 행사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당사자 세대가 고령화되고,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된 상황이 반영된 경향으로 보인다.

둘째 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인권 의제가 국내 제도로 정착되어 간 흐름, 즉 인권 정책의 제도화 확산이다. 지속적 확장을 보이는 주제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제도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확산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조례 제정,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 제도화는 지방자치와 인권조례, 인권 태도 및 의식 측정, 다문화 인권 교육 등의 연구가 늘어난 배경으로 추정된다. 토픽 네트워크에서 교육 관련 토픽들이 별도의 군집을 형성하면서도 체벌, 교권, 학생인권조례 등을 매개로 연결성을 보이는 것은, 교육의 장이 인권 의제가 충돌하고 제도화되는 현장으로 작동해 왔음을 보여준다. 스포츠 인권연구의 성장 역시 2010년대 이후 체육계 폭력,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며 제도적 대응이 모색된 시점과 유사하다.

돌봄과 재활 서비스 및 예방, 상담 체계 관련 연구의 증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4년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돌봄 공백이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 흐름이 돌봄이 개인이나 가

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재구성된 배경으로 보인다. 앞서 토픽 네트워크에서 ‘복지·돌봄과 피해회복’ 관련 토픽들이 하나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은, 이들 주제가 개별적으로 부상한 것이 아니라 돌봄과 사회권이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축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인권연구의 관심이 국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심에서, 적절한 돌봄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라는 사회권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축은 글로벌 인권규범의 수용이다. 절대 비중은 아직 작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세를 보이는 주제들은 국제 규범의 형성과 그것의 국내적 수용이라는 경로를 보여준다. 기업·인권 관련 연구의 성장은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채택 이후 국내 기업의 인권경영 논의가 본격화되고, 2020년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논의가 국내 기업 수출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의가 등장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 연구의 부상은 2007년 최초 법안 발의 이후 17대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입법 시도와 시민사회의 찬반 논쟁이 축적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 입법 논의 자체가 유엔 인권기구의 반복된 제정 권고 등 국제 평등 규범의 국내 수용 요구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범과 국내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권과 인공지능 관련 연구의 성장 역시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된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뉴딜 정책,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 및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등 국제적 의제가 국내에서 현지화하는 과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 인권연구는 민주화 이행기 의제의 점진적 감소, 인권 정책 등의 제도화 확산, 글로벌 인권규범의 수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특정한 이론적 기획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 권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출판된 인권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탐색하기 위해 2001년 이후 KCI에서 제목 또는 키워드에 ‘인권’이 포함된 학술지 논문 1만여 편을 수집하여, CTM을 수행하여 수집한 인권연구에 내재된 주요 연구 주제를 추출했다. 전체 토픽을 8개의 그룹으로 재분류한 결과, ‘북한·국제정치와 인권’과 ‘인권담론과 역사·문화적 재현’이 각 8개 토픽(1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헌법·형사사법과 기본권’과 ‘교육권과 인권교육’이 각 7개 토픽(14.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연구 주제 범주에 대한 시계열 분석에서는 ‘헌법·형사사법과 기본권’, ‘북한·국제정치와 인권’, ‘인권담론과 역사·문화적 재현’ 등 전통적 규범·제도 영역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교육권과 인권교육’, ‘복지·돌봄과 피해회복’, ‘소수자·차별과 인권’ 등 실천적 성격의 연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차별금지법, 기후·환경권과 인공지능 등 글로벌 의제나 새로운 의제와 결합된 연구는 현재의 비중은 작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발견은 기존 인권 이론의 논의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앞서 논의한 인권 정책의 제도화 확산과 글로벌 인권규범의 수용이라는 두 축은, 인권 규범이 보편적 선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제도와 일상적 실천 속으로 번역되는 과정을 다룬 인권의 현지화 논의(Merry, 2006)와 맞닿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 기업의 인권경영을 다루는 연구의 성장은 글로벌 규범이 국내의 구체적 제도 영역에서 재맥락화되는 과정을 학술장이 추적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역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중심에서 돌봄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라는 사회적 권의 의제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인권의 실현이 국가로부터의 보호만이 아니라 적극적 의무의 이행을 요청한다는 논의(Shue, 1996)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인권

연구의 주제 변동은 개별 의제의 부침을 넘어, 인권 개념 자체의 작동 방식이 선언에서 제도로, 방어에서 보장으로 옮겨 온 궤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철학적, 규범적 토대를 다루는 연구 주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은 두 가지 상이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천 영역으로의 흡수라면 규범적 논의는 소멸한 것이 아니라 개별 의제 연구의 암묵적 전제로 잠재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반면, 규범적 성찰 자체의 약화라면 실천적 연구가 자신의 정당화 기반과 분리될 위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상반된 두 해석에 대한 타당성 판단은 토픽 비중에 기반한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별도의 검토를 요청하는 문제다. 다만, 생활세계 중심 연구로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학술적 분화라 하더라도, 혐오 표현의 확산과 사회적 배제, 다자주의 인권 레짐의 동요와 같은 최근의 국내외 상황이 보편주의적, 규범적 논의의 재구축을 오히려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인권’이라는 단일 검색어를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제목, 초록, 키워드 등에서 인권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분석 대상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인권이라는 용어의 수사적 활용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둘째, 토픽 모델링은 대량의 데이터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효과적이거나, 개별 텍스트 고유의 맥락과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이 연구는 한국 인권연구의 거시적인 지형을 기술함에 초점을 두었기에 개별 연구 분야의 구체적인 특성과 맥락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논문접수일: 2026. 05. 18, 논문심사일: 2026. 06. 10, 게재확정일: 2026. 06. 19)

참고문헌

- 강명숙. 2012. “인권교육 연구 동향: 최근 5년의 국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5(3): 1-14.
- 김두년. 2013. “인권법과 인권사회학.” 『국제법무』 5(2): 25-48.
- 김현준. 2018. “한국정치학의 인권연구 현황 분석: 동향과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52(1): 171-200.
- 박초희. 2019. “인권감수성 연구동향 고찰: 2003-2019년을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상담연구』 1(1): 1-13.
- 오수웅. 2010. “현대의 인권연구경향 비판과 대안의 모색: 인권의 본질로서 능력과 연구방향.” 『정치사상연구』 16(2): 73-105.
- 이병량·황철화. 2019. “한국 행정학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 경향의 분석.” 『정부학연구』 25(3): 109-137.
- 이지혜. 2009. “인권교육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1): 1-25.
- 이혜영·신현기. 2019.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 『특수교육논총』 35(2): 197-221.
- 정명선·이경준. 2012. “국내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동향 분석과 제언.” 『한국위기관리논집』 8(5): 143-164.
- 조효제. 2020. 『인권의 최전선: 조효제 교수의 미래 인권 강의』. 서울: 교양인.
- 조효제. 2023. “인권연구 6권 1호 권두언.” 『인권연구』 6(1): i-iii.
- 허종렬. 2020. “4차산업혁명 시대 법·인권과 법·인권교육 연구 동향.” 『법과인권교육연구』 13(2): 1-22.
- Andreassen, Bård Anders, Claire Methven O'Brien, and Hans-Otto Sano. 2024.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in Human Rights: Approaches and Trends in Human Rights Methodology and Methods.” In: Bård Anders Andreassen, Claire Methven O'Brien, and Hans-Otto Sano (Eds). *Research Methods in Human Rights: A Handbook*.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pp. 1-12.
- Asnawi, Mohammad Hamid, Anindya Apriliyanti Pravitasari, Tutut Herawan,

- and Triyani Hendrawati. 2023. "The Combination of Contextualized Topic Model and MPNet for User Feedback Topic Modeling." *IEEE Access*, 11, 130272-130286.
- Bagozzi, Benjamin E., and Daniel Berliner. 2018. "The Politics of Scrutiny in Human Rights Monitoring: Evidence from Structural Topic Models of US State Department Human Rights Report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6(4): 661-677.
- Bianchi, Federico, Silvia Terragni, and Dirk Hovy. 2021. "Pre-Training Is a Hot Topic: Contextualized Document Embeddings Improve Topic Coherence." In: *Proceedings of the 59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the 11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olume 2: Short Papers). Onlin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759-766.
- Blei, David M., Andrew Y. Ng, and Michael I. Jordan.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Cobo, Manuel Jesús, Antonio Gabriel López-Herrera, Enrique Herrera-Viedma, and Francisco Herrera. 2011. "Science Mapping Software Tools: Review, Analysis, and Cooperative Study among Tool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2(7): 1382-1402.
- Coomans, Fons, Fred Grünfeld, and Menno T. Kamminga. 2010. "Methods of Human Rights Research: A Primer." *Human Rights Quarterly* 32(1): 179-186.
- Denny, Matthew J., and Arthur Spirling. 2018. "Text Preprocessing for Unsupervised Learning: Why It Matters, When It Misleads, and What to Do about It." *Political Analysis* 26(2): 168-189.
- Fariss, Christopher J. 2019. "Yes, Human Rights Practices are Improving over Tim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3(3): 868-881.
- Griffiths, Thomas L., and Mark Steyvers. 2004. "Finding Scientific Topic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1(suppl 1): 5228-5235.

- Hopgood, Stephen. 2013. *The Endtimes of Human Rights*.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Human Rights Advocacy and the History of Human Rights Standards. n.d. "Introducing Human Rights Advocacy and the History of Human Rights Standards." <https://humanrightshistory.umich.edu/about-the-project/overview/> (검색일: 2026. 1. 30).
- Human Rights in Context. n.d. "Research." <https://www.humanrightsincontext.be/research-vision> (검색일: 2026. 1. 30).
- Human Rights Watch. n.d. "About Our Research." <https://www.hrw.org/about/about-us/about-our-research> (검색일: 2026. 1. 30).
- Koo, Jeong-Woo, and Jaesung Choi. 2019. "Polarized Embrace: South Korean Media Coverage of Human Rights, 1990-2016." *Journal of Human Rights* 18(4): 455-473.
- Langford, Malcolm. 2024. "Mixed Methods in Human Rights Research." In: Bård Anders Andreassen, Claire Methven O'Brien, and Hans-Otto Sano (Eds). *Research Methods in Human Rights: A Handbook. 2nd ed.*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pp. 292-320.
- Martilla, John A. and John C. James.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Merry, Sally E. 2006. "Transnational Human Rights and Local Activism: Mapping the Middle." *American Anthropologist* 108(1): 38-51.
- Röder, Michael, Andreas Both, and Alexander Hinneburg. 2015. "Exploring the Space of Topic Coherence Measures." In: *Proceedings of the Eigh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Search and Data Mining*. New York: ACM. pp. 399-408.
- Schofield, Alexandra, Måns Magnusson, and David Mimno. 2017. "Pulling Out the Stops: Rethinking Stopword Removal for Topic Models." In: *Proceedings of the 15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ume 2, Short Papers*. Valencia: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432-436. <https://aclanthology.org/E17-2069.pdf> (검색일: 2026. 1. 30).
- Severo, Priscilla Paola, Leonardo B. Furstenau, Michele Kremer Sott,

- Danielli Cossul, Mariluzza Sott Bender, and Nicola Luigi Bragazzi. 2021. “Thirty Years of Human Rights Study in the Web of Science Database (1990–2020).”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4): 2131.
- Shue, Henry. 1996. *Basic Rights : subsistence, affluence,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karstad, Kjersti. 2024. “Critical Human Rights Research.” *Journal of Human Rights* 23(3): 297-313.
- Smith, Rhona. 2018. “Human Rights Based Approaches to Research.” In: Lee McConnell and Rhona Smith (Eds). *Research Methods in Human Rights*, Abingdon: Routledge. pp. 6-23.
- Stevens, Keith, Philip Kegelmeyer, David Andrzejewski, and David Buttler. 2012. “Exploring Topic Coherence over Many Models and Many Topics.” In: *Proceedings of the 2012 Joint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Computational Natural Language Learning*. Jeju: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952-961.
- Wallach, Hanna M. 2006. “Topic Modeling: Beyond Bag-of-Words.” In: *Proceedings of th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Pittsburgh: ACM. pp. 977-984.
- Wang, Rui, Xing Liu, Yanan Wang, Shuyu Chang, Yuanzhi Yao, and Haiping Huang. 2025. “Mining Topics towards ChatGPT Using a Disentangled Contextualized-Neural Topic Model.” In *Proceedings of the Eighteen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Search and Data Mining*. Hannover: ACM. pp. 539-548.

<Abstract>

**Where is Korean Human Rights Research Heading?:
Analyz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Trends via Topic
Modeling, 2001~2025***

Seong-Gwon Cho ** · Jongwoo Kim ***

Research on human rights in South Korea has grown steadily over the past two decades across multiple disciplines, including law, political science,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However, few attempts have been made to provide a comprehensive, cross-disciplinary overview of the field, as existing trend analyses have been limited to individual disciplines and based on relatively small samples. This study analyzes the thematic structure and temporal shifts in Korean human rights research by applying Contextualized Topic Modeling (CTM) to 10,739 journal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1 and 2025, retrieved from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using the keyword “human rights” (인권). The analysis identified 49 research topics, reclassified into eight broader categories. Topics in traditionally dominant normative and institutional areas—such as constitutional law, criminal justic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maintained a high overall share but exhibited a gradual decline. In contrast, topics tied

* This article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5S1 A5B5A16007328)

** BK21, The Social Innovation Convergence Program, Sungkyunkwan University

*** BK21,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to everyday life, including education and children, welfare and care, and discrimination and minorities, showed a sustained increase. Emerging issues such as climate and the environmen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ere also found to be gaining momentum, albeit from a small base.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framework was further applied to map the standing and trajectory of each topic across four quadrants, identifying areas of expansion, stabilization, and contraction. This study empirically charts the macro level landscape and evolving directions of human rights research in South Korea through large scale, interdisciplinary bibliometric analysis.

Keywords: Human Rights Studies, Research Trends, Text Mining, Topic Modeling, Interdisciplinary Studies